

한동훈 “尹 비상계엄은 불법”… 나경원 “왜尹 끌어들이나”

국민의힘 대선후보 경선 토론회

한동훈, 후보들에 계엄·탄핵 입장 물어
나경원 “韓 탄핵선동 가장 앞장 서
보수통합 위해 대선후보 그만 뒤라”
이철우 “탄핵 안 했으면 재판도 없어”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에 반대하고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소추에는 찬성한 한동훈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가 홍준표·나경원·이철우 경선 후보에게 계엄·탄핵 관련 입장을 물으며 차별성을 드러내려 했다. 이에 나경원 후보는 경선 토론회에 왜 윤 전 대통령을 끌어들이냐며 “한 후보는 대선 도전을 중단하고 다음 기회를 노리라”고 제안했다.

한동훈 후보는 20일 서울 강서구 ASSA아트홀에서 열린 국민의힘 대선 후보 1차 경선 B조(이철우·나경원·홍준표·한동훈 후보) 토론회에서 “저는 우리당이 배출한 대통령이 한 것이라 하더라도 비상 계엄은 불법이라고 봤고, 그래서 앞장서서 막았다”며 “국민이 먼저였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상 계엄에 반대하지만 탄핵할 정도는 아닌 경미한 과오라고



이철우(왼쪽부터), 나경원, 홍준표, 한동훈 제21대 대통령 선거 국민의힘 경선 후보가 20일 서울 강서구 ASSA아트홀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선거 국민의힘 1차 경선 B조 토론회에서 토론 시작 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스1

생각하시는 국민들도 계시는 것으로 안다”며 “국민들의 입장에서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저는 그 영역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후보는 차례대로 나머지 세 후보들에게 계엄과 탄핵 관련한 입장을 물었다. 특히 한 후보는 다른 후보들에겐 계엄과 탄핵에 관련한 입장을 묻다가 나경원 후보에게 “최근에 들어서 윤 전 대통령 쪽에서 신당(창당) 논의가 보도된 것이 있다”며 입장을 물었다.

나 후보는 “왜 대통령 경선하는데 윤

전 대통령을 자주 끌어들이냐”라며 “한 후보가 (당 대표 시절) 탄핵과 내란 물이를 하고 탄핵을 선동한 것 때문에 정말 결국 이 지경을 만들었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을 자백했다 하면서 사실상 내란 물이, 탄핵을 선동하는 데 가장 앞장섰다”고 부연했다.

이철우 후보는 한 후보의 물음에 “탄핵 소추를 안 했으면, 헌법재판을 받을 필요가 없다”며 “108명의 국회의원을 뽑아 준 것은 탄핵을 하지 말라는 것”이라고 했다. 이 후보는 “왜 경솔하게 탄

핵소추에 들어 갔냐”라며 “한 후보가 지금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있나. 지금 우리 당 후보로 나왔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나경원 후보는 주도권 토론에서 한동훈 후보에게 “한 후보는 그동안 좋은 자리도 많이 하셨는데, 보수 통합을 위해서 이번 대선 후보는 그만 두시고 (당을 위해) 헌신하시면 어떻겠냐”라고 직격했다. 한 후보는 “나 후보의 정치를 응원하겠다”라고 말했다.

나 후보는 “(그만) 하시겠냐, 안 하시겠냐”라고 재차 물었다. 한 후보는 “지

금 상황에서 제가 꼭 필요한 위치에 있다고 생각한다”며 “제가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나 후보는 “(한 후보가) 헌신하거나 희생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저는 사실 이번에 한 후보가 한번 헌신하면 굉장히 큰 정치적 자산이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다”고 했다.

나 후보는 한 후보가 국민의힘 대표로 있었던 작년,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 게재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비방글’과 관련한 논란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나 후보는 홍 후보에게 “우리 당 홈페이지 게시판에도 이상한 댓글이 많이 있었다”며 입장을 물었다. 홍 후보는 “지금 조사하고 있지 않나. 아마 경찰에서 결론을 거의 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나 후보가 “결론 낸 것이 무엇이 있냐”라고 묻자 홍 후보는 “그건 내가 말 못하겠다. 당사자가 있는 것 같다”고 답을 피했다.

나 후보는 “왜 탄핵에 이르게 되고 조기 대선까지 하게 됐냐면, 결국 국회 독재를 못 막아낸 것도 있지만 당을 하나로 만들어내지 않았다”며 “그래서 대통령도 대통령 노릇하기 어렵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한다”며 윤 전 대통령과 각을 세웠던 한동훈 후보를 간접적으로 비판했다.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李, 영남서 ‘90.81%’ 득표… 민주당, ‘李 대세론’ 재확인

충청·영남 대선후보 순회경선

김동연 “부울경 메가시티 만들 것”
김경수 “영남권 광역교통망 건설 추진”
이재명 “북극항로 개척… 해수부 이전”

주말 사이 충청·영남권을 대상으로 치러진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순회 경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합산 89.56%라는 압도적인 지지율을 얻어 ‘어대명(아차피 대통령 후보는 이재명)’ 분위기를 끌어올리고 있다.

박법계 민주당 선거관리위원장은 20일 울산전시컨벤션센터 A홀에서 열린 영남권 대선 후보 경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권역별 누적 합산 89.56%로 전체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이어 김경수 후보가 5.17%, 김동연 후보가 5.27%를 얻었다.

영남권으로 한정하면 권리당원·대의원 합산 득표율은 90.81%, 김경수 후보가 5.93%, 김동연 후보가 3.26%였다. 전



20일 오후 울산 울주군 울산 전시컨벤션센터 A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영남권 합동연설회에서 이재명(왼쪽), 김경수(중앙), 김동연 후보가 지지자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뉴스1

날(19일) 치러진 충청권 대선 후보 경선에선 이 후보가 88.15%, 김동연 후보가 7.54%, 김경수 후보가 합산 4.31%를 얻은 바 있다.

이날 세 주지는 경선에 앞서 열린 합동 토론회에서 수도권 집중 현상을 막기 위해 지방균형 발전을 추진하고 유능한 경제 대통령이 되겠다고 입을 모았다.

경제부총리 출신인 김동연 후보는 영남권 합동연설회에서 “민주당 DNA를 가진 경제 해결사 김동연이 영남의 도약을 책임지겠다”며 “노무현, 문재인을 배출한 곳, 인재가 넘치고 역동성 가득했던 곳, 어디인가. 바로 영남”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런 영남에서 청년들이 빠져나가고 있다. 부산 스스로 ‘노인과 바다’라고 자조한다”면서 “저

김동연, 모든 금융공기업의 부산 이전, 완수하겠다. 산업은행, 수출입은행까지 부산으로 이전하겠다”고 공약했다.

아울러 “여기 계신 김경수 후보와 손잡고 부울경 메가시티 만들겠다”며 “오히려 한걸음 더 나아가겠다. ‘부울경 메가시티 플러스’를 만들어 내겠다”고 했다.

경남도지사 출신인 김경수 후보는 권역의 생존을 위해 영남권 광역교통망 건설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는 “영남의 어느 도시나 지역을 가더라도 수도권처럼 대중교통만으로 다닐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영남에도 촘촘한 광역교통망을 만들겠다. 부산과 창원, 울산을 순환 철도망으로 연결하겠다”며 “창원과 동대구, 경북을 잇는 대순환철도도 있겠다. 김천과 진주, 거제를 연결하는 서부경남 KTX도 최대한 빨리 완공시키겠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수도권 하나에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전국에 다섯 개의 각기 다른

수도권을 만들어야 한다”며 “이 곳 부·울·경(부산·울산·경남)과 대구경북, 호남권과 충청권, 수도권, 전국을 이렇게 5개 권역으로 나누어 5개의 메가시티를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 수도권도 살고, 지방도 함께 살 수 있다”고 호소했다.

이재명 후보는 북극항로 개척으로 부산을 명실상부한 ‘해양도시’로 일으켜 세우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동남권 발전의 발판이 될 북극항로도 면밀히 준비하겠다”며 “부울경에 모인 화물이 북극항로를 통해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장면을 상상해 보자. 배후단지에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조선 해운 물류기업들이 자리한다면 동남권 경제부흥도 현실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북극항로 시대 준비를 위해 해수부 부산 이전을 시행하겠다”며 “북극항로가 열어젖힐 새로운 ‘대항해시대’의 중심에 부·울·경이 위치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또한 “산업화의 신화, 대구·경북에는 제조업과 첨단산업의 잠재력이 무궁무진하다”며 “이차산업 벨트와 미래형 자동차 부품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바이오 산업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겠다”고 했다. /박태홍 기자

한덕수 권한대행, 금주 정부편성 추경안 시정연설

정부, 내일쯤 국회에 추경안 제출 예정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이번주 국회에서 정부 편성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한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 시정연설에 나선 것은 최규하 전 대통령 이후 46년만이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덕수 권한대

행은 조만간 추경안에 대한 국회 시정연설을 하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8일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재해·재난 대응 3조2000억원 ▲통상·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 4조4000억원 ▲소상공인 지원 4조3000억원 ▲기타 2000억원 등 12조2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심의·의결한 바 있다.

추경안에는 재해대책비를 기존 5000억원에서 1조원 이상으로 2배 가량 증액했고, AI분야에서는 1조8000억원을 추가 투입해 그래픽처리장치(GPU) 1만장을 확보할 방침이다. 또 저소득층 청년과 최저 신용자 등의 생활 안정을 위한 정책자금 공급을 기존보다 2000억원 확대하고, 소상공인 부담을 경감하

기 위한 연 50만 원 수준의 크레딧 사업을 신설하기도 했다.

정부는 오는 22일쯤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정부와 국회는 한 권한대행의 시정연설을 위한 국회 본회의 개최 일자를 23~25일 중 하루로 협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시정연설은 정부가 예산안의 내용 및 추진 방향을 국회에 설명하는 것으로, 대통령이 직접 설명한 것이 원칙이다. 역대 정부 사례를 살펴보면 이명박 정

부 때까지는 취임 첫해에만 시정연설을 한 후 총리 대독으로 넘기거나, 아예 국회를 찾지 않은 경우가 많다. 그러나 박근혜 전 대통령부터는 ‘국회 경시’라는 비판을 수용해 직접 시정연설을 하는 관례가 생겼다.

이 관례가 깨진 건 지난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5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 불참하면서 2013년 이후 11년 만에 한 권한대행이 국무총리 신분으로 연설문을 대독한 바 있다. /서예진 기자 syj@